

절반 이상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시행의 디딤돌 마련

- 「2025년 제2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참여 지자체 31개 추가 선정 (100개→131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제2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31개 시·군·구를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추가 선정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추어 필요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충실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53개 시·군·구를 참여지역으로 선정(제1차 시범사업 공모)하였으며, 2025년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제2차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1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0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131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기존: 총 47개 → ('25.5월) 1차 공모: +53개(총 100개) → ('25.6월) 2차 공모: +31개(총 131개)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강북구·강서구·송파구, ▲(부산) 서구·동구·해운대구·강서구, ▲(경기) 고양시·화성시·평택시·광명시·여주시, ▲(강원) 속초시, ▲(충남) 아산시·논산시·부여군, ▲(전북) 진안군, ▲(전남) 광양시·고흥군·보성군·화순군·강진군·해남군·함평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 ▲(경북) 경주시·칠곡군, ▲(경남) 창원군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6월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협업 인력배치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 협업 등 사업 준비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하게 된다.

임슬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31개의 시·군·구를 포함해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2.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책임자	과 장	장영진 (044-202-3030)
		담당자	팀 장	장태영 (044-202-3040)
			사무관	이종범 (044-202-3042)
			사무관	김해순 (044-202-3034)

붙임 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 총 131개 (기존 100, 추가 31)

시도 (시군구)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시군구)			
	소계 <A+B+C> 갯수	예산지원형 시범사업<A>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증 	신규 참여 <'25. 2차 공모> <C>
계 (229)	131	12	88	31
서울 (25)	16	-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중랑구(12)	용산구, 강북구, 강서구, 송파구(4)
부산 (16)	11	-	금정구, 수영구, 중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사상구(7)	서구, 동구, 해운대구, 강서구(4)
대구 (9)	4	-	달서구, 서구, 달성군, 군위군(4)	-
인천 (10)	2	-	부평구, 계양구(2)	-
광주 (5)	5	서구, 북구(2)	남구, 광산구, 동구(3)	-
대전 (5)	5	대덕구, 유성구(2)	중구, 동구, 서구(3)	-
울산 (5)	5	-	동구, 중구, 북구, 울주군, 남구(5)	-
세종 (1)	1	-	세종시(1)	-
경기 (31)	20	부천시, 안산시(2)	성남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시흥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13)	고양시,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여주시(5)
강원 (18)	8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홍천군, 횡성군, 태백시, 고성군(7)	속초시(1)
충북 (11)	11	진천군(1)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10)	-
충남 (15)	6	천안시(1)	청양군, 태안군(2)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3)
전북 (14)	7	전주시(1)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익산시(5)	진안군(1)
전남 (22)	17	여주시(1)	담양군, 영암군, 영광군 나주시, 무안군, 신안군(6)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10)
경북 (22)	6	의성군(1)	포항시, 성주군, 고령군(3)	경주시, 칠곡군(2)
경남 (18)	6	김해시(1)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남해군(4)	창녕군(1)
제주 (2)	1	-	제주시(1)	-

1 통합지원 제도 개요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24.3월 제정)
→ 現 시범사업(131개 지자체) → ‘26.3월 법 시행, 전국 적용

- (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
-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지원내용)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 (지원절차) 통합지원 ①신청 → ②조사 → ③판정 → ④지원계획 수립 → ⑤통합지원 제공 → ⑥모니터링
- (기반조성) 통합지원 절차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 전담조직에서 노인, 장애인을 포함하여 통합지원 절차 운영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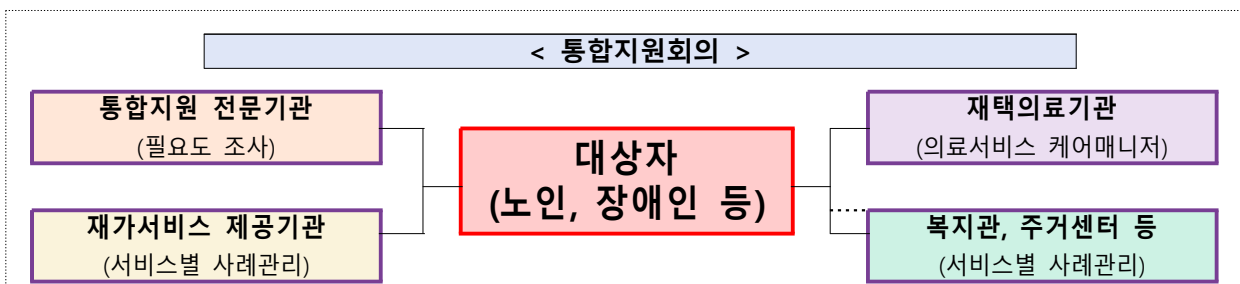


2

사업 절차

- ① (신청) 현행 분절적인 요양·돌봄 서비스 신청구조를 읍면동 주민 센터, 건보공단 등에서 신청가능 구조로 전환하여 접근성 제고
 - 대상자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읍면동)에 신청서가 송부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 ② (조사·판정)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및 판정을 위해 조사체계를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 * 노인(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국민연금공단)
 - (노인) 읍면동·건보 지사에서 사전평가를 실시 → 통합판정을 활용하여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면밀히 파악 → 적정 서비스군 판정
 - (장애인) 장애인 통합판정조사*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 조사항목별 평가척도를 통한 서비스 필요도 결정(연금공단)
 - * 보완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활용하여 의료, 건강 등 욕구 확인
- ③ (계획수립·제공)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제공서비스 제공계획을 승인·조정하는 통합지원회의의 운영 (시군구, 읍면동,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 (역할) 시군구(읍면동)가 마련한 개인별 지원계획 승인 및 변경·종결
 - (계획 승인) 조사 결과·서비스 적합성 논의, 사례회의 등 보완 후 확정
 - (변경·종결) 욕구·상태 변화 확인, 서비스 부적합 시 변경·종결 검토 후 확정

<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수요자 중심 지원계획 수립 >



- ④ (모니터링) 제공기관별 계획에 따라 적절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 및 중단사유가 발생시 종결 실시
 - * (종결 사유 예시) ①사망, ②병원 입원, ③시설 입소, ④중단의사, ⑤욕구 충족

3

시범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100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25.6.12. 기준) 중, 20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확대 필요
 - 민·관 협력 인프라 마련, 표준모델 프로세스 경험 축적 등 지자체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지원
 - 기존 노인 외 65세 미만 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시범사업 참여 기회 우선 제공

□ 주요 내용

- (추가공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신규 시범사업 지자체 확대
- (지원내용) 교육·전문 컨설팅 지원 및 건보공단 등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 (교육)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 합동 컨설팅으로 사업방향 설정, 실행계획서 작성 등 지원
 - (협업체계) 통합지원 협업 인력 배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등 정보 이용 지원
 - (조사판정) 본사업에서 활용될 종합판정 체계 구축 및 시범 적용

□ 추진일정

- 시범사업 공모(6.2~10) → 참여 지자체 선정(6.13) → 지자체 교육(6월) → 전담조직 구성 등 지자체 사업준비(6월) → 지자체 사업 수행 및 서비스제공(7월~) → 본사업 시행('26.3.27.)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